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에 대한 이론정립을 위한 시론: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이 영 훈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이론적 전제: Kalecki 자본주의경제 및 사회주의경제이론
- III.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
- IV. 맺음말

I. 머리말

기존 북한경제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연구 방법론의 부재일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자료제약의 문제는 북한경제분석의 진입장벽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방법론의 모색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자료제약의 문제가 연구자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연구방법론의 개발은 연구자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에서 연구방법론의 부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정형화된 이론(formal

theory)이 없음에서 온다. 사회주의경제이론가로서 랑게(O. Lange), 칼레츠키(M. Kalecki), 부르스(W. Brus), 노브(A. Nove), 셀루츠키(R. Selucky), 식크(O. Sik), 코르나이(J. Kornai) 등이 알려져 있으나, 이들 중 신고전학파나 케인즈학파의 이론처럼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는 없다. 그만큼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발전은 정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는 사회주의경제의 이론화가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그것은 획일화된 정치체제와 정치적 억압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사회주의 경제는 정치에 의해 지배된다는 기존의 통념과 무관하지 않다. 단적으로 1938년 소련의 몰로토프(Molotov)가 “(사회주의)가격이란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학에 관한 것”이라는 경고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체제인 만큼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지배했고, 그에 따라 일관된 경제이론으로 추상화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정책결정에 일관된 논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이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메카니즘을 칼레츠키의 자본주의·사회주의경제이론을 분석방법론으로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의 정립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자, 사회주의경제의 거시분석이 된다. 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계획을 통해 전반적인 자원 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부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곧 거시경제분석으로 직결되게 되며,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분석은 사회주의경제이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으로서 성장, 투자, 가격결정, 소득분배정책 등이 무엇에 의해 규정되며,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틀로서 칼레츠키의 사회주의경제이론 외에 자본주의 경제이론 - 적대적 경쟁하의 자본가의 자본축적과 소득분배이론 - 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회주의경제에 적용하기에는 체제와 경제주체의 차이에 따른 한계는 있지만, 그들이 처한 적대적 경쟁에서의 생존이란 제1의 과제와 생산수단소유에 따른 지배관계 면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

문이다. 즉 사회주의국가를 지배관료와 노동자로 구성된 거대독점기업으로 대체해 볼 수 있다면, 자본주의기업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처한 경쟁의 성격은 '적대적'이며, 이러한 적대적 경쟁 하에서 '생존'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우선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자본주의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사회주의에서는 지배관료와 노동자의 관계¹⁾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를 거대독점기업으로 대체해 볼 수 있다면, 자본주의 기업의 경제행위에 대한 이론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를 고찰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II. 이론적 전제: Kalecki의 자본주의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이론

칼레츠키(1899-1970)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Th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는 칼레츠키를 케인즈(Keynes), 맑스(Marx)와 함께 현실 경제 및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한 지적 전통의 세 가지 원천으로서 평가하고 있다. 칼레츠키는 케인즈의 아이디어로 알려져 있는 유효수요이론을 케인즈에 3년 앞서 발표하였고, J. Robinson, Eichner, Kregel 등은 post-Keynesian의 전통에 케인즈보다 칼레츠키가 기여한 바가 크

1) 사회주의를 계급사회로 보는 연구로서 부라보이(M. Burawoy), 부루스(W. Brus), 엘젠한스(H. Elsenhans)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부라보이는 사회주의국가가 “착취자이고 동시에 억압자로, 잉여의 취득자이자 생산의 규제자로 생산의 지점에 등장한다”(M. Burawoy, 1999, p. 196)고 했으며, 부루스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부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계승한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가 “국가적 소유가 우위에 있는 체제일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에 놓인 조직구성체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W. Brus, 1975, p. 943)고 했다. 엘젠한스는 소유관점에서 계급을 설명하는 부루스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국가를 잉여의 전유권과 처분권을 가진 관료계급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차문석,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정책: 소련, 중국, 북한의 생산성의 정치」, 성균관대학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논문, 1999, pp. 58-61.

다고 평가하고 있다.²⁾ 이러한 그의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Harcourt 가 칼레츠키를 “현대 위대한 경제학자들 중에 가장 무시된” 학자로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칼레츠키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1936-55년까지 서구와 미국에서 자본주의경제를 연구하였고, 매카시즘으로 폴란드로 귀국하게 된 1955년 이후 죽을 때까지 고국에서 정책개발에 직접 참가하면서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경제문제를 연구하였다. 한때 전망계획위원회(the Commission of Perspective Planning)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중공업우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입장은 그를 곤경에 빠뜨렸고 그의 추종자들이 숙청되거나 출국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의 대부분의 연구는 자본주의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결정, 투자 및 경기변동, 소득분배이론, 화폐이론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경제분석으로서 체계화되어 있는 부분은 경제성장이론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사회주의 경제성장이론만으로는 사회주의국가의 정책결정행위를 분석할 수 없으며, 다른 이론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칼레츠키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과 달리 사회주의사회 또한 계급사회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의 독점자본주의이론에서 사회주의 경제분석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칼레츠키의 자본주의경제이론 중에서 사회주의경제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과 그의 사회주의이론을 재구성하여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정책결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행위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성장 및 투자결정,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된 가격결정 및 소득분배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정리해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사회주의경제성장이론, 자본주의 독점기업의 가격결정이론(미시)과 자본주의소득분배이론(거시)으로 요약된다.

우선, 사회주의국가의 성장을 결정방식을 보기로 하자. 이처럼 경제성장의 문제를 우선시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작성의 순서상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것이 적정성장을 및 투자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칼레츠키의 사

2) M. C. Sawyer, *The Economics of Michal Kalecki*, pp. 1-3.

회주의경제성장이론을 살펴보자.3)

칼레츠키는 단기소비 희생을 당연시하고 성장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당시의 성장방식을 비판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성장이 아니라 소비에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당시 동구에서 발생했던 주민들의 저항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정책당국이 개인들의 현재 소비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단기소비희생과 장기소비이득을 비교하여 적정성장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존 중공업우선 성장노선의 근거인 펠드만 성장이론이 간과했던 문제들을 검토했다. 즉 현실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기되는 노동력부족, 투입물의 수입수요증가, 특정 부문의 병목현상(bottleneck)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①자원 및 특정 부문의 병목현상과 ②성장률제고에 따르는 소비제약의 정치·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성장률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사회주의성장이론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성장률결정방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률은 투자를, 자본산출계수, 기술적·조직적 제약의 해결, 감가상각률의 함수로 나타낸다.

$$r_{t+1} = \frac{i_t}{m_{t+i}} + u_{t+1} - a_{t+1} \quad (4)$$

r_{t+1} : t+1기의 성장률, i_t : $\frac{I_t}{Y_t}$, m_{t+i} : 자본산출계수(1단위 생산에 필요한 투자), u_{t+i} : 기술적·조직적 제약의 해결, a_{t+i} : 감가상각률 m , a 와 w 가 일정하다면, i 가 a 만큼 증가할 때, 성장률은 $\frac{a}{m}$ 만큼 증가하며, 그에 따라 단기의 소비는 감소한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과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 (1956-64년): Kaleckian CGE모델분석」,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2000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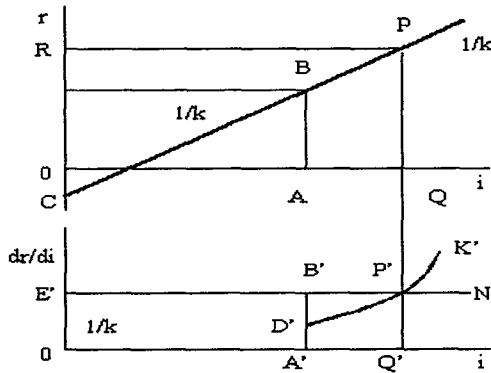
4) 단순화를 위해, $Y = I + S + C$ 를 $Y = I + C$ 로 변형하면(재고투자 S를 투자 I에 합치시키면), $r = \frac{i}{k} - \frac{m}{k}(a - u)$ 은 $\mu = 0$ 가 되므로, $k = m$ 이 되어

$$r = \frac{i}{m} - a + u \text{이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적정투자율과 적정성장률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는 투자증가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감안하여 적정투자율과 적정성장률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정부결정곡선(government decision curve)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투자비율 i 증가, 즉 소비비율 $(1-i)$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저항 $w(i)$, $w' > 0$ (투자비율이 증가하면 근로자들의 저항은 증가)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i 증가에 따른 순이득을 $\Delta r - w(i) * \frac{\Delta i}{(1-i)}$ 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부는 투자증가에 따른 손실과 이득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수준, 즉 순이득이 0가 되는 수준에서 i 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frac{\Delta r}{\Delta i} = \frac{w(i)}{(1-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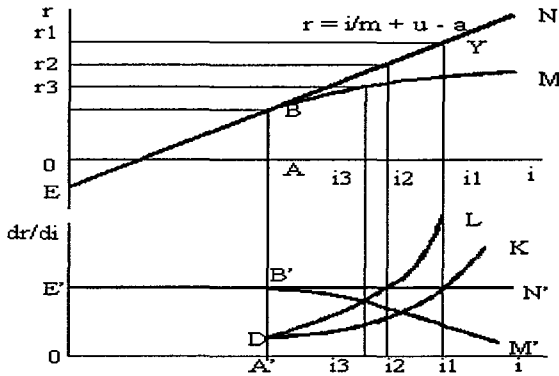
이때, 적정투자율은 <그림 2-1>에서 $E'N'=DK$ 인 점 i_1 이 된다. $E'N'$ 는 위 성장식에서 i 와 r 간의 기술적 관계($\frac{\Delta r}{\Delta i}$)를 표현한다. 즉 OE' 는 $\frac{1}{m}$ 이 되며, 투자와 산출간의 CRS(constant return to scale)를 나타낸다. DK 는 $\frac{w(i)}{(1-i)}$ 이며, 정부결정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2-1> 적정성장률과 적정투자율의 결정



위 성장식에서 m , a 와 w 가 일정하다면, 투자지출이 소득보다 빨리 증가할 경우(i 가 증가한다면), 가속성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앞에 제시된 성장의 제약요인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성장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림 2-2>을 통해 보기로 하자.

<그림 2-2> 성장제약요인과 적정성장률 결정



① 현재 노동력제약이 없으나, 향후 고속성장으로 노동력제약에 직면할 것이 예견된다. 이때 정부가 성장률을 기존의 자연성장률 r_0 에서 Δr 만큼 올리려 할 때, $f(r-r_0)$ 는 그들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성장률을 제고보다는 작을 것이다: $0 < \frac{\Delta f(r-r_0)}{\Delta r} < 1$, for $\Delta r > 0$.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하게 되며, 정부결정곡선은 노동력제약이 없을 때보다 기울기가 급해지게 된다. 이때 적정 투자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frac{\Delta r}{\Delta i} = \frac{w(i)}{(1-i) \frac{\Delta f(r-r_0)}{\Delta r}}$$

그에 따라 정부 결정곡선은 DK에서 DL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노동

력 제약이 없을 때보다 낮은 적정투자율 i_2 와 낮은 적정성장률 r_2 가 결정된다. 한편 노동력부족 외에도 수입수요증가, 특정부문의 bottleneck 등 다른 외적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정부결정곡선은 DK에서 DL로 이동하게 되고, 적정투자율과 적정성장률은 각각 i_2 , r_2 로 낮아지게 된다.

② 고속성장의 진행으로 투입물의 수입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무역수지의 균형을 위해 수출을 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을 곤란케 하는 기술·조직적 제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수출증가는 투자를 더욱 증가시켜야만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자본산출계수 m 의 증가를 의미하고, 그 결과 직선 EBN은 곡선 EBM으로, 직선 E'B'N'은 곡선 E'B'M'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적정투자율은 처음보다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성장률도 전보다 하락하게 된다. 더욱이 이것은 노동력 부족의 경우처럼 정부 결정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적정투자율과 적정성장률은 각각 i_3 , r_3 로 더욱 낮아지게 한다.

③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병목현상은 경제 전체의 발전을 제약한다. 이때 수입을 늘이거나 수출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역수지의 균형을 깬다. 물론 다른 부문에서의 생산증가를 통해 수입을 줄이거나 수출을 늘임으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꾀할 수도 있으나, 기술적·조직적 제약으로 인한 수입에의 절대적 의존 또는 취약한 수출경쟁력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부문에서의 bottleneck이 발생하면, ②에서와 같은 이유로 m 을 증가시키게 된다. 더욱이 병목현상은 일정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요컨대 칼레츠키는 정부결정곡선이란 개념을 통해 제약조건 하에서 사회주의국가가 어떻게 적정성장률 및 적정투자율을 결정하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장이론은 현실사회주의성장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방법론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국가의 투자, 가격 및 소득분배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칼레츠키의 독점자본주의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자본주의 분석을 수용하는 것은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주의국가를 지배관료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된 독점기업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의 가격이론과

소득분배이론에 국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기업은 신고전학파와는 달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 성장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⁵⁾ 이를 전제로 기업이 결정하는 가격은 평균가변비용에 마크업비율을 곱해주는 mark-up pricing으로 결정되며($p = (1 + m)AVC$) 이때의 마크업비율 m 은 독점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이런 그의 독점기업의 가격결정논리는 이후 post-Keynesian의 mark-up pricing, full-cost pricing, target-return pricing 등으로 발전하는데, 사회주의국가의 가격결정 원리는 란지로티(Lanzillotti)의 target-return pricing⁶⁾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란지로티의 target-return pricing에 따르면 profit margin은 투자를 고려하여 정한 목표이윤율(target rate on investment)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Lanzillotti, 1958, p. 923). 즉, 가격은 full-cost pricing으로 결정되며($p = (1 + m)UC$, ($UC = AVC + AFC$)),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윤량은 $r^*pK = r^*p(vq^*/u^*) = m(UC)q^*$ 이 된다. 따라서 마크업은 $m = \frac{r^*v}{u^* - r^*v}$ 으로 결정된다(r^*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윤율,

$v = \frac{K}{q^e}$: 자본산출비율, q^e : 이론적 생산능력, $u^* = \frac{q^*}{q^e}$: 정상가동률).

이러한 target-return pricing은 마크업비율이 독점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Kalecki에 비해, 대부분의 생산수단이 국가독점이고 국가가 가격과 이윤율을 정하는 사회주의경제현실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장률과 그에 따른 투자율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차원에서 조세율(간접세가 가장 큰 원천이므로 가격에 반영)을 결정하는 사회주의 조세 및 가격결정방식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은 생산비용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비용결정가격(cost-determined prices)과 수요 측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수요결정가격

5) 그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수용하면서, "The Supply Curve of an Industry under the imperfect competition"(1940) 이후 이윤극대화가정을 폐기한다.

6) M. Lavoie, *Foundations of Post-Keynesian Economic Analysis*, Vermont: Edward Elgar, 1992, pp. 129-133.

(demand-determined prices)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최종재의 가격에 적용되는데, 최종재의 공급은 유희설비로 인해 가격의 변화없이 수요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최종재산업은 대체로 과점의 형태를 띠는데, 그 결과 mark-up pricing을 하며, 생산비용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게 되고 경직적이다. 반면 후자는 원료, 농산물 등에 적용되는데, 이들의 경우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그 결과 수요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게 되며, 완전경쟁의 경우처럼 탄력적이다. 그런데 그의 분석은 최종재의 독과점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소득분배이론은 자본주의체제는 적대적 경쟁체제이며 그 체제의 목적은 소비가 아니라 이윤추구에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은 각각 재산소득(property income)과 노동소득(labor income)을 생산의 대가로 수취한다. 둘째, 이들은 각기 다른 저축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자본가들은 높은 저축성향을 보이는 반면 노동자들은 낮은, 거의 0에 가까운 저축성향을 보인다.⁷⁾

이것의 함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노동자의 노동소득은 거의 전부가 소비로 지출된다. 반면, 자본가의 소득은 이윤, 지대, 이자 등으로 분배되며, 이들은 투자와 소비로 지출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민소득 항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begin{aligned} Y &= \pi + W \\ &= I + C_C + C_W \end{aligned} \quad (1)$$

(π : gross profit, W : wage and salaries, I : 총투자, C_C : 자본가소비, C_W : 노동자소비)

$$\pi = I + C_C \quad (2)8$$

둘째, 식(2)에서 이윤이 먼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자본가들

7) 저축에 대한 이러한 칼레츠키의 가정은 Ricardian-Marxian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단순히 노동력의 재생산비에 불과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8) 만약 정부와 해외부문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의 투자와 소비지출은 별도로 결정되고 그 결과 이윤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앞에서 투자와 이윤, 가격간의 관계를 밝힌 target-return pricing과 일관되는 논리이기도 하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자본가들이 과거보다 많은 소비와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이윤을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와 소비결정이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⁹⁾ 는 자본가들의 결정방식에 근거하고 있다.¹⁰⁾ 이것은 마치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에서 $Y = C + I$ 에서 C와 I가 별도로 결정되며, 그 결과 Y가 결정되는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기업의 성장극대화, 불확실성, 재원조달의 제약 등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윤극대화, 확실성, 재원조달의 무제약을 가정하는 신고전학파의 인과관계와는 반대가 된다.

셋째, 투자와 저축간의 관계를 보면, 과거의 투자결정은 현재의 투자지출을 결정하며, 저축은 그러한 투자지출에 적응하게 된다. 이것은 신고전학파의 저축과 투자간의 인과관계와는 반대가 되는 논리로서, 칼레츠키는 투자결정이 저축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의 논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기업의 투자가 저축을 초과한다면 ($S_{t-1} < I_t$),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투자재산업의 생산증가 \Rightarrow 고용증가 \Rightarrow 소득증가를 낳으며, 이는 다시 소비재산업의 생산 증가 \Rightarrow 고용 증가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이윤증가는 저축증가를 낳게 한다.

이를 함수 및 곡선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는 이자율과

$$\begin{aligned} Y &= \pi + W + T \\ &= I + (C_C + C_W) + G + (X - M) \\ &= \pi + (W - C_W) + (T - G) + (X - M)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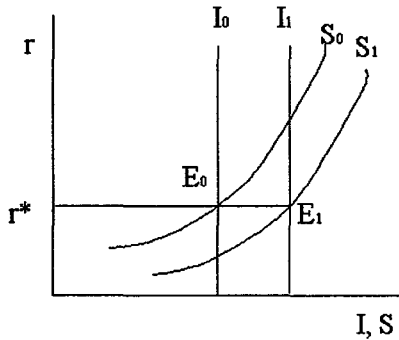
여기서 $T - G = 0$, $X - M = 0$ 그리고 칼레츠키의 가정대로 $W - C_C = 0$ 라면, $\pi = I + C_C$ 이 된다.

9) M. Kalecki,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p. 78-79.

10) 이러한 투자와 소비 그리고 이윤결정에서의 인과관계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윤을 조정한다(Wood, 1975; Eichner, 1973)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거의 무관하며, 저축은 이자율과 소득의 함수($S = f(r, Y)$)이다. E_0 에서 $I_0 = S_0$ 인데, 투자가 I_1 으로 증가한다면, 이자율은 변동하지 않고 소득 증가(자본가의 이윤증가)에 의해 저축은 S_1 으로 증가하여 E_1 에서 $I_1 = S_1$ 이 된다.

〈그림 2-3〉 투자=저축



요컨대 사회주의경제분석에 수용할 수 있는 칼레츠키의 독점자본주의 이론을 간략히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현대자본주의를 독과점, 불완전경쟁으로 특징짓고 있다. 그러한 적대적 경쟁 하에서 기업은 경쟁에서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따라서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성장극대화(growth maximization)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투자(자본축적)를 확대하려 하며,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이윤이며, 기업은 이를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은 각각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을 생산의 대가로 수취하며, 자본가들은 높은 저축성향을 보이는 반면 노동자들은 거의 0에 가까운 저축성향을 보인다. 자본가들의 소득은 투자와 소비지출로 전환되며, 투자지출의 결과 이윤이 결정된다. 이처럼 결정된 이윤은 저축의 원천이 됨으로써, 자본가의 투자→이윤→저축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전제로 저축=투자라는 식이 성립하게 된다.

Ⅲ.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

1. 북한의 성장 및 투자정책

소련의 중공업우선의 성장정책은 고도성장을 위한 발전노선으로서, 단기간에 선진제국주의국가들을 따라잡지(catch up) 않으면 혁명이 와해될 위기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저발전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발생했을 경우 그 혁명은 시장의 힘에 의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Marx의 목시론적 언급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인간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힘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은 모두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수준을 다시 그 전제로 한다.…… 생산력의 발전 없이는 단지 궁핍만이 일반화 될 뿐이고, 따라서 궁핍과 함께 필수품을 둘러싼 투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 수 없어, 온갖 해묵은 더러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들 없이는 공산주의는 단지 하나의 지역적인 현상으로만 존재하며,…… 미신에 둘러싸인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교류의 확장은 지역적 공산주의를 없애버릴 것이다.”¹¹⁾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는 맑스의 예견과 달리 후진국에서 그것도 전쟁과 전쟁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취약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및 체제 우월성의 시현으로서 고속성장은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인정되었다.

북한 또한 한국전쟁과 그로 인해 첨예화된 체제경쟁은 대내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중공업우선주의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¹²⁾ 북한에서의 중공업우선주의는 “속도(성장)와 균형”의 관계에서 잘

11) K. Marx &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y*, 1846,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 I』, 서울: 청년사, 1988, p. 66.

12) 북한의 중공업우선주의 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이영훈,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표현되고 있다. 김일성은 속도를 사회주의경제의 합법칙성으로, 균형을 그것의 전제로 양자간의 관계를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속도는 목적이고 균형은 그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¹³⁾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추격발전을 추구하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 처럼¹⁴⁾ 북한의 경우도 자원배분의 균형 이전에 성장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적¹⁵⁾ 우선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그들의 자원배분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계획작성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칼레츠키에 따르면, 국가가 계획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성장률을 결정하고, 다음 이를 달성할 투자율을 결정한다.¹⁶⁾ 즉 $Y=C+I$ 라 할 때, $i=\frac{I}{Y}$ 를 결정하게 되면, $1-i=\frac{C}{Y}$ 가 자동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의 우선 결정은 북한

기원: 1956-64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본주의와 국가의 재도전(사회경제평론 13호)』, 서울: 풀빛, 1999; 「한국전쟁과 북한의 전후복구 및 건설: 체제경쟁에 따른 고도성장의 빛과 그림자」, 『통일문제연구』, 12권1호, 통권33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0을 참조할 것.

- 1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p. 201.
- 14) 1931년 스탈린은 “우리는 서구의 발전된 사회에 비해 150년이나 뒤쳐져 있다. 우리는 이 간격을 10년 내에 좁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대약진 시기의 구호도 “15년 내에 영국을 앞지르고 미국을 따라잡자”였다. 김일성도 1958년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세 차례의 5개년계획으로 이룩한 수준을 우리는 두 차례의 계획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차문석, 앞의 글, p. 29.
- 15) 사회주의에서 ‘축적(accumulation)’은 서구의 투자개념에 대응한 맑스의 용어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되었으나 소비되지 않은 국민소득의 몫이다: $A = Y - C$.
- 16) M. Kalecki, “On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Perspective Plan”, 1957,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2.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입증된다.

“노임수준을 너무 높게 정하여도 안되고 너무 낮게 정하여도 안됩니다. 노임수준을 정하는 것은 해마다 국민소득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필요한 축적을 먼저 내놓고 인민들의 소비품을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¹⁷⁾

물론 (신)고전학파의 입장처럼, 사회주의국가에서 투자는 저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축 대신에 조세를 투자원천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전년도의 세입보다 금년도의 세출이 대부분 크게 나타남($S_{t-1} < I_t$)을 볼 때, 금년도의 투자는 전년도의 세입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목표 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저축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인 것처럼, 사회주의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인 것이다. ‘브르즈와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표현한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은¹⁸⁾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국가의 역사적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한 것이다. 성장과 축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의 자원배분의 성격은 칼레츠키의 자본주의기업(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성장극대화를 추구)의 투자 및 가격결정이론을 사회주의국가의 정책결정분석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17)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데 대하여」(재정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담화,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360-361.

18) K. Marx, *Capital I*, 1887, 김수행 역, 『자본론 I』, 서울: 비봉출판사, 1990, p. 753.

2. 북한의 가격결정 및 소득분배 정책

사회주의에서 축적을 위한 주된 수단은 국민소득의 약 2/3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이다. 재정은 거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turnover tax)이며,¹⁹⁾ 다음으로 법인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deductions from enterprise profits)이다.

그런데 이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모두 가격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징수된다.²⁰⁾ 따라서 사회주의의 가격은 조세수입의 주된 통로가 되고, 조세수입은 계획된 성장을 위한 축적의 원천이 된다.²¹⁾ 반면 직접세(소득세)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소득세는 1975년에 폐지되어 "세금없는 나라"임을 과시해 왔다. 즉 사회주의의 축적의 재원은 조세에서 구하고 있으며, 조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결국 주민들의 소득에서 출연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간접세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윌친스키(Wilczynski)에 따르면, 거래세의 부과율이 여러 생산물의 수요탄력성과

19) 물론 간접세는 자본주의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간접세의 비중은 훨씬 적은 것이며, 사회주의의 간접세는 주된 이유는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4th 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p. 139.

20) 간접세(생산자가격-소매가격)의 큰 비중은 윌친스키가 사회주의가격제도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중가격제(the two-tier price system)-생산자가격(producers' price or factory price)과 소매가격(retail price)-의 존재를 지적하는 근거가 된다. J. Wilczynski, *Ibid.*, p. 133. 두 종류의 가격의 차이(간접세)는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Ibid.*, p. 139.

21) 박진은 북한의 거래세의 역할을 균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계획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도록 가격수준을 정함으로써 미시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력을 조절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득과 소비재 생산과의 격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갭(inflationary gap)을 제거하는 거시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박진,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한국개발연구원, 1994, p. 64. 이러한 평가는 미·거시 수준에서 공급부족에 따른 소비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소비억제를 위한 수단인 측면보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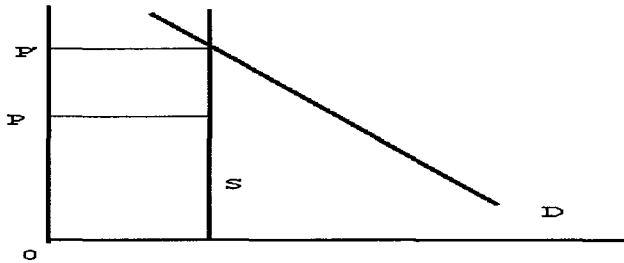
중앙당국의 사회 전체적인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된다²²⁾고 하고 있다. 한편 돕(M. Dobb)의 경우는 이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와 간접세 및 가격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²³⁾ 폐쇄경제 하에서 소득은 노동소득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소득은 모두 소비재 구입에 사용되며 신규투자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임금 wx (임금수준 w , 노동자총수 x)는 재화의 총비용 그리고 소매시장에서의 주민의 총지출과 같아야 한다: 소득=생산비=지출= wx . 그러나 만일 순투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의 일정 비율 I/y 가 새로운 공장 설비, 반제품이나 생산수단의 비축 확대에 사용된다면, 소비재의 공급과 국민지출 사이의 위의 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즉 소비재생산비는 주민총지출보다 $wx \cdot I/y$ 만큼 작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매시장에서 주민의 총지출은 여전히 wx 이나 그 기간 동안 소비재생산비는 $wx \cdot (y-I)/y$ 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주민지출-소비재생산비용 = $wx - wx \cdot (y-I)/y = wx \cdot I/y$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소비 지출과 비용가격으로 평가된 소비재 공급 사이의 차이는 수행된 투자지출(소비재의 임금비용과 관련된)의 양에 비례할 것이다. 투자지출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 지출, 예컨대 균비지출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때 소비지출과 소비재공급 사이의 괴리는 소비재 소매가격을 $wx \cdot I/y$ 만큼 그 비용 이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조정된다. 그 투자지출(균비지출을 포함)을 고려한 인상폭이 거래세의 크기가 된다.

비록 단순한 논리지만 이를 통해 사회주의에서의 소비재 공급과 수요, 간접세징수, 그리고 투자지출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돕의 논리를 그림으로 재구성해 보면, <그림 3-1>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생산비는 $OP(wx \cdot (y-I)/y)$ 이고 최종균형가격이 $OP'(wx)$ 이면, 거래세는 $PP'(wx \cdot I/y)$ 가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지출이나 균비지출이 증가하면, I/y 가 증가하게 되므로 거래세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22) Wilczynski, Ibid., p. 135.

23) M. Dobb,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London: Routledge & Kegan, 1972,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서울: 형성사, 1989, pp. 446-447.

〈그림 3-1〉 거래세액의 결정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거래세액의 결정논리는 자본주의 독점기업이 투자의 규모에 따라 이윤의 크기를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target-return pricing과 그 논리가 매우 흡사하다. 이를 좀더 확대하면, 거래세 뿐만 아니라 국가기업이익금이나 협동단체이익금 또한 가격에 반영되어 징수되는 조세이며 국가의 투자재원인 만큼 그 크기는 일차적으로 투자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에서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 생산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소비품의 가격에 들어 있는 사회순소득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예산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²⁴⁾ 국가기업이익금은 거래수입금과 함께 사회주의기업소, 기관들에서 이루어진 사회순소득의 분배형태로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부분을 이룬다.²⁵⁾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사회순소득은 「중앙집권적순소득」과 「기업소순소득」으로 구분되고, 국가의 중앙집권적순소득은 「거래수입금」의 형태로

24) 『경제사전』(1985), pp. 68-69.

25) 국가기업이익금은 사회순소득의 분배형태라는 의미에서는 거래수입금과 공통성을 지니지만 그 내용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다.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가격 속에 일정한 크기로 고착되어 있으면서 생산물이 실현되는 즉시로 국가예산에 납부된다. 그러나 국가기업이익금은 그 크기가 가변적이며 기업소에 조성되는 이윤의 규모와 자체충당몫에 의존한다. 거래수입금이 국영기업소 및 생산협동조합을 부과단위로 한다면 국가기업이익금은 오직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영기업소들만을 부과대상으로 한다. 『재정금융사전』(1995), p. 130; 『경제사전』(1985), p. 201.

국가예산에 동원되고, 기업소순소득의 많은 부분은 「국가기업이익금」과 「협동단체이익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동원된다.²⁶⁾ 기업소순소득의 다른 일부는 기업소기금, 상금기금, 그리고 공동축적기금, 문화후생기금을 비롯한 기업소 자체의 수요에 분배이용된다.²⁷⁾ 이를 그림으로 요약해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²⁸⁾

<그림 3-2> 북한의 부가가치 구성

V	S		
임 금	사회순소득		
	중앙집권적순소득	기업소순소득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기업소 자체기금 (사내유보이윤)

이제 북한은 거래세(거래수입금)를 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거래세가 부과되는 소비재 가격체계를 통해 살펴보자.²⁹⁾

26) 기업소순소득의 구성은 소유형태에 따라 그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기업소 자체 기금(사내유보이윤에 해당)의 비중은 국가기업소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제한된 반면, 협동단체기업의 경우는 매우 크며, 협동농장의 경우는 그 전부를 차지한다. 『경제사전』(1985), pp. 305-306.

27) 『경제사전』(1985), p. 678; 『재정금융사전』(1995), p. 660.

28) 북한의 부가가치를 칼레츠키의 국민소득 균형식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에서 식(1) $Y = \pi + W = I + C_C + C_W$ 이라 하면, 북한에서는 $Y =$ 사회순소득 + 임금 = 국가의 투자지출 + 국가의 소비지출 + 노동자의 소비지출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에서 π (gross profits)는 북한에서 사회순소득에 해당하며, 사회순소득에서 국가가 수취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및 협동단체이익금은 자본가가 수취하는 이윤 및 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9) 북한의 조세 및 가격제도에 관한 실증분석은 이영훈, 「북한의 '자력갱생'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1957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1999를 참조할 것.

〈그림 3-3〉 북한의 가격체계³⁰⁾

원가(C+V)		총이윤(S)		
고정자본(C)	임금(V)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사내유보이윤

북한의 가격제도는 사회주의 일반적인 가격제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가격의 종류를 보면, 국가기업소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에 대해 책정되는 도매가격, 소비자가 소비재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소매가격,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매가격, 서비스에 대한 운임 및 요금 등이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매가격은 첫째, 국영기업소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에 한하여 제정되며, 계획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이 부가된 액수이다. 둘째, 도매가격은 단지 회계상 목적에서 제정되며, 생산수단의 결제방식은 '은행돈자리잔고'를 통한 '무현금결제'로 이루어진다. 셋째, 도매가격은 생산수단의 유통에 적용되는 가격이므로 일반적으로 거래수입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매가격은 첫째, 원칙적으로 상품인 소비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것은 국정소매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나 이중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국정소매가격이다. 둘째, 소비재의 거래는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며, 소매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대중소비재와 사치품에 대해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혹은 높게 가격을 결정한다. 셋째, 소매가격은 원가에 기업소순소득, 거래수입금 및 상업부가금을 더하여 결정된다.

이처럼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격결정의 원칙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매가격 결정에서 계획원가에 일정율의 이윤이 부가된다고 밝히고 있듯이, 독점기업과 같은 방식인 mark-up pricing(또는 full-cost pricing)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소매가격은 수요공급을 일치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또한 투자수요 및 바람직한 소비수요 등의 사회

30)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도소매상의 수입인 상업부가금은 생략하였다.

적 신호를 고려하여 간접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소매가격 또한 mark-up pricing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이렇게 결정된 가격들은 시장가격만큼 탄력적이지 않으며 매우 경직적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가격의 경직성은 칼레츠키가 자본주의가격은 경직적인 반면 사회주의가격은 탄력적이라³¹⁾는 논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자본주의 독점가격 결정논리를 적용해야 타당할 것이다.

둘째, 그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소비재가격은 도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비재부문의 물가변동은 억압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의 형태로 잠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칼레츠키의 가격이론 - 유희설비가 존재하는 최종재 산업(주로 독과점산업)의 경우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산출이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농산물, 원료생산의 경우 완전경쟁의 경우처럼 가격이 변한다 - 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북한의 경우 자원제약 하에 중공업우선의 정책을 추구했으므로, 소비재산업인 경공업이나 농업은 자원배분의 순서에서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경우는 항상 소비재부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처럼 공급제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재산업보다는 소비재산업의 가격은 탄력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경우, 계획경제의 편의에 따른 가격경직성으로 인하여 소비재부문의 가격변동은 억압된 인플레이션으로 잠재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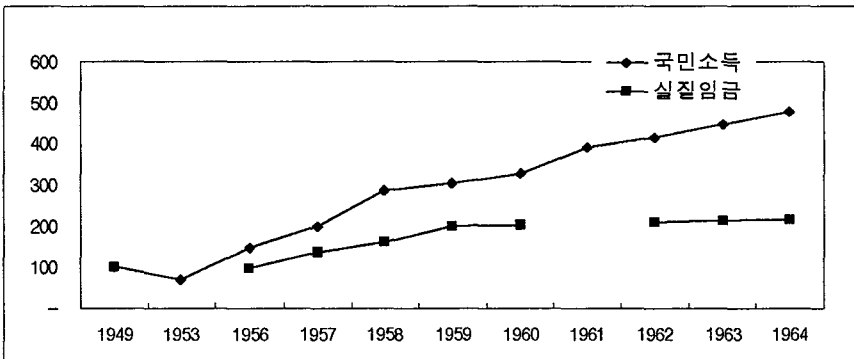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의 소득분배정책을 보도록 하자. 북한에서 주민소득은 필요한 축적을 결정하고 난 다음, 그 나머지로 결정된다. 앞에서 제시된 김일성의 언급 - "노임수준을 정하는 것은 해마다 국민소득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필요한 축적을 먼저 내놓고 인민들의 소비몫을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최고선으로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득은 노동력 재생산비에 불과할 것이며, 노동력 재생산비에 불과한 임금의 성격은 칼레츠키

31) M. Kalecki, "Central Price Determination as Essential Feature of a Socialist Economy", 1958,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Socialism: Functioning and Long-Run Planning*, Oxford: Clarendon Press, 1992, pp. 113-119.

의 가정 - 노동자의 노동소득은 전부 소비되며, 저축성향은 거의 0에 가깝다 - 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³²⁾ 칼레츠키의 가정대로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소득이 거의 전부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그림 3-4> 북한의 국민소득과 노동소득의 증가추이를 통해, 북한의 임금은 거의 노동력 재생산비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소비에 비해 축적(국민소득-소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³³⁾

〈그림 3-4〉 북한의 국민소득과 실질임금의 증가추이(1949-64년)



출처: 『조선중앙년감』(각 년도)을 참조하여 작성.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비에 불과한 노동소득의 성격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축적재원을 저축으로 조달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축적의 재원을 조세, 특히 거래수입금에서 조달하게 된다. 그것은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낮은 저축성향과 직접세 부과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가능성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처럼 소득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는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이 소비로 돌려지기 쉽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만이 저축된다. 또한 소득이 노동소득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높은 세율의 직접세(소득세)는 생산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³⁴⁾ 따라서 사회

32) 북한의 저축규모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 모델분석」, 4장을 참조할 것.

33) 물론 실질임금의 정체(소비수준의 정체)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경제군사병진노선에 따른 군비증가라 할 수 있다.

주의에서는 국가주도에 의해 조세 특히 간접세 중심으로 축적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정책결정에 일정한 메카니즘이 내재되어 있음을 규명하였고, 이를 이론화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들의 결정 메카니즘을 칼레츠키의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주의국가를 지배관료와 노동자로 구성된 거대 독점기업으로 대체해 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칼레츠키의 사회주의경제성장이론, 독점자본주의의 가격결정이론과 소득분배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자본주의 가격결정이론(부분적으로 후기 케인지안의 이론을 포함)에 따르면, 독점기업들은 적대적 경쟁 하에서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성장극대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자본축적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투자량을 결정하게 되며, 정해진 투자량을 고려하여 목표이윤율을 결정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된 투자량에 따라 저축이 사후적으로 조정된다. 한편 그의 자본주의 소득분배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에는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이 존재하며, 자본가계급의 저축성향은 높은 반면 노동자계급의 저축성향은 거의 0에 가까운데, 그것은 그들의 임금수준이 노동력재생산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주의국가의 제1의 과제는 적대적 경쟁에서의 생존이며, 이는 성장제일주의의 경제정책과 자원배분으로 나타난다. 사회주의국가의 계획작성에서 보면, 먼저 목표 성장률이 결정되면, 이어 이에 필요한 투자율을 결정하게 되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 확보한다. 즉 투자재원을 잉여가치 중 거래세와 국가기업이익금의 형태로 국가가 수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정책결정 메카니즘은 자본주의 독점기업의

34) M. Dobb,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London: Routledge & Kegan. 1972,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서울: 형성사, 1989, p. 450 참조.

가격결정과 계급간 소득분배 메카니즘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조세 중심의 축적방식도 그의 소득분배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칼레츠키 이론의 도입은 다른 이론들에 비해 향후 북한경제를 포함한 사회주의경제 연구방법론의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수학을 이용한 논리전개는 북한경제모델의 개발에도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61. 『김일성저작집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68.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박 진.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서울: KDI. 1994.
- 이영훈.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기원: 1956-64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사회경제평론13호)』. 서울: 풀빛. 1999.
- _____. 「북한의 '자력갱생'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1957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_____. 「북한의 경제성장과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모델분석」,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한국전쟁과 북한의 전후복구 및 건설: 체제경쟁에 따른 고도성장의 빛과 그림자」. 『통일문제연구』, 12권1호, 통권33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0.
- 차문석.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정책: 소련, 중국, 북한의 생산성의 정치」. 성균관대학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논문. 1999.
- Brus, W. *Socialist Ownership and Political System*, Routledge & Kegan Paul, 1975.
- Burawoy, M. 정범진 옮김, 『생산의 정치』, 서울: 박종철출판사. 1999.
- Chilosi, A. "Kalecki's Quest for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his Macroeconomic Theory." M. Sebastianni. ed. *Kalecki's Relevance Today*, London: Macmillan Press. 1989.
- Dobb, M.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London: Routledge & Kegan. 1972.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서울: 형성사. 1989.
- Domar, E. "A Soviet Model of Growth". *Essay in the Theory of Economics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 Kalecki, M. "Essays in The Economic Fluctuations". 1937.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 Capitalism -Business Cycle and Full Employ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_____. "The Determinants of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 Income", 1938.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 Oxford: Clarendon Press. 1991.
- _____. "Central Price Determination as an Essential Feature of a Socialist Economy". 1958.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Socialism: Functioning and Long-Run Planning.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_____. "On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Perspective Plan". 1957.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Socialism: Functioning and Long-Run Planning.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_____.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owth in a Socialist Economy". 1963.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V: Socialism: 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 of Invest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93.
- _____. "Problems in the Theory of Growth of a Socialist Economy". 1959.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Socialism: Functioning and Long-Run Planning.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ange, O.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1937/8. Lippincott. B. E. ed.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Univ. of Minnesota Press. 1938.
- Lavoie, M. Foundations of Post-Keynesian Economic Analysis, Vermont: Edward Elgar, 1992.
- Marx, K. &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y. 1846.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 Marx, K. Capital I. 1887. 김수행 역. 『자본론1』. 서울: 비봉출판사. 1991.
- Sawyer, Malcolm C. The Economics of Michal Kalecki.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5.
- Wilczynski, J. Economics of Socialism(4th ed.).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82.
- Wood, A. The Theory of Profi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